

김현미 장관, “건설현장, 안전·안심 일터로 조성” 강조

- 18일 대곡~소사 복선전철 현장 찾아 임금직불제 점검·안전환경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8일(금) 대곡~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제1공구 노반공사 현장*을 방문하여,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.

* (발주) 서부광역철도 / (시공) 현대건설 외 2개사 / (기간) '16.6 ~ '21.6(공정률 74.5%)
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정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”면서,

* 「건설안전 혁신방안」('20.4월), 「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」('20.5월)

- 특히, “여러 관계기관,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'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며,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통계 집계('99년) 이후 가장 낮은 수치”로 나타났다고 말했다.
- 다만, 올해 상반기는 사고사망자가 254명으로 전년 대비 25명이 늘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.
- 이와 함께, 김 장관은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에서는 '18년 추석부터 '20년 추석 전까지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”면서,
 - 이러한 임금체불 감소세 성과와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을 민간공사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.
- 또한, 김 장관은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

- 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임금·대금이 지급되도록 국가철도공단(구 한국철도시설공단) 에서 추진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'21년부터 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철도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.
- (임금직접지급제) '19.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,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,000여 곳에서는 '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근절
-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“건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,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”면서,
- “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현장에서부터 임금 체불 제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- 또한, 코로나-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정부와 함께 방역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2020. 9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